

경찰윤리

4

경찰행정의 가치들

- 정의(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인권

행정가치의 본질: 합리성과 도덕성

- 가치
 - 판단 주체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바람직한 것 혹은 옳은 것에 관한 관념
 - 행동의 목적, 수단,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함에 관한 관념
 - 좁은 의미에서는 '좋은', '바람직한',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종류의 옳음, 의무, 미덕, 아름다움, 진실, 성스러움을 의미
- 옳음(rightness)과 그름(wrongness)은 윤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
- 인간의 사회생활은 공동생활이며, 인간은 공동생활을 통해 공동선(common good),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
 -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동생활의 질서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사회적 가치' 이다
- 사회적 가치규범은 공동체 생활의 기본 규칙을 정한 기본 규범이다
 - 정의, 평등, 자유, 형평, 공익 등 다양한 사회적 규범은 공동체 사회의 질서와 관련된 것이다

행정가치의 본질: 합리성과 도덕성

- 행정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규범적 용어가 합리성(관료주의)와 도덕성(민주주의)
 - 거의 모든 행정가치의 개념적 속성을 포괄하고 있고, 이들 가치의 균형이 현대 행정의 주된 과제
- 행정가치의 두 가지 본질적 요소는 행정윤리(행정철학)의 내용 및 방향을 조명할 수 있는 기본틀 제시
- 합리성
 - 합리성은 사전에 설정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가용한 대안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 정책결정자 (혹은 경찰공무원)는 주어진 목표 달성을 '극대화' 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사 이먼, 수단과 목표의 연계로 좋은 행정이 현실적으로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
 - 베버의 합리성 : 정책목표의 수단 뿐만 아니라 목표까지도 비교하면서 행위의 모든 국면을 평가하는 것
- 합리성의 두 가지 기본 전제
 - 합리성은 특정의 처방적 행위를 요구하고, 또한 가치로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포함한다
 - 합리성이 목표와 수단을 분리하는 것. 합리성은 오직 수단 혹은 행위의 과정에만 적용되며 목표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가치의 본질: 합리성과 도덕성

- 도덕성

- 행정이 단순히 정책집행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능동적으로 배분하는 정책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한다.
- 바람직한 행정행태를 유도, 평가하기 위한 도덕적 틀로서 세 가지 보완적 관점이 제시됨

- ① 정직, 성실함 같이 행정인이 직면하는 인간 '양심'에 관한 접근이다. 이런 도덕적 특질을 정직, 열의 겸손 그리고 효과적이고도 만족할 만한 봉사에 기여하는 다양한 속성들로 규정
- ② 재량의 윤리이다. 정책 형성과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재량권의 사용이 정당화되고 변호될 수 있느냐 이다.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한, 그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특별한 도덕적 책임(의무)를 지닌다.
- ③ 개인보다 집합적 수준에서 도덕적 행정행위에 관해 의미를 찾는다. 공공정책이 국민의 의사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기본 속성을 반영한다. 민주사회에서 행정은 개인성의 실현, 시민 간 평등 확보, 보편적 참여를 반영하지 않는 한 정당화될 수 없다.

행정가치의 딜레마

- 합리성은 수단적, 실질적, 집합적, 결과중심적인 특성을 지니고, 도덕성은 최종적, 절대적, 형식적, 배분적, 원칙중심적이다.
- 합리성 : 목적론적 가치체제에 근거하여 수단과 목표를 분리
 - 어떤 행정행위도 국민을 위해 최대의 선만 창출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공리주의 입장
- 도덕성 : 의무론적 가치체제에 기반하여 행정행위가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공정한 배분에 기여할 때 유효성을 지닌다는 입장
- 합리성과 도덕성은 행정의 '가치체계'로 개념화하는 기여
 - 합리성과 도덕성의 가치체제가 어떻게 다양하게 제시되어 온 행정가치들을 수용, 체계화하는가를 이해
 - 경찰공무원이 특정의 행위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이 준거할 합리적 혹은 도덕적 행동기준은 무엇인가?
 -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에 합리적 행위 혹은 도덕적 행위가 달성 가능한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

경찰행정이 추구하는 실천적 가치: 정의

- 정의는 어원을 이루는 'just'가 '올바른'이라는 의미 이외에 '공정한'이라는 의미를 지님.
- 아리스토텔레스 :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당을 받는 것으로 정의
 - 넓은 의미에서 정의는 법을 따라는 것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평등을 의미
 - '동등한 사람만'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동등하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차등의 원칙도 포함 (평등성과 유사한 개념)
 - ❖헌법 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돌바흐 : 각자의 재능과 업적에 따라 대우하는 것. 즉, 형평이 곧 정의로 보고 형평성을 강조
 - 개인의 덕성, 능력 또는 공익에의 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은 당연함
- 시즈위크 : 정의는 권리와 자유, 부담과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 즉, 공정성으로 해석
 - 배분적 정의는 단지 자의적 차등(arbitrary inequality)을 재제하는 것임.
- 결국 정의는 형평성, 공정성, 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옳다'라는 가치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헌법의 평등의 원칙

- 헌법상 기본권이 바로 '평등권'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1조 제1항 앞부분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여, 우리나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일반적 평등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헌법이 말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일체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절대적 평등'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즉 우리 헌법은 어떤 차별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별은 허용한다는 뜻의 '상대적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헌법상 평등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형식적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개인의 조건이나 한계까지 고려해 기회를 주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까지 포함한다.
- 일반적인 자유권이 국가의 간섭행위 자체를 막는 데 집중하는 반면, 평등권은 일단 국가가 행위를 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양편의 성격이 다르니 위헌 판단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 위헌인지 아닌지(1999.12.23. 98헌마363)를 따지면서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 (가령)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경찰관에 대한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 한 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8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당장의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A경위는 가해 의심 부모가 신고자를 묻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는 실언을 했다. 이로 인해 이 아동의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공중보건과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두 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는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비록 실수였다고는 하나 경찰관의 말 한마디가 신고자 신분 노출이라는 결과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한편 이 경찰에 대한 경징계 처분에 의료계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의료진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제, 2021/3)

정의의 다양한 입장

- 샌델(Sandel)은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
 - 정의를 둘러싼 딜레마적 요소로 '행복', '자유'와 '미덕' 임. 즉,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냐, 개인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냐, 아니면 공동체의 미덕을 장려하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냐?
- 공리주의 정의론, 자유주의 정의론, 평등주의 정의론, 롤스(Rawls)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 공동체주의 정의론 등으로 구분 가능
- 공리주의의 정의론 :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 자유주의 정의론 :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 어떤 행정행위도 국민을 위해 최대의 선만 창출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공리주의 입장
- 공동체주의의 정의론 :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 공동선이란, '사회 구성원 전부 또는 대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인 것들의 총체' 임.

공리주의 정의론

-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성에 두는 철학사상. 효용성은 '쓸모'를 의미하고, 실제생활에 도움이 되는지가 관건임.
- 특정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사회 구성원의 쾌락,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효용성에 따라 결정됨.
 -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하기에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
 - 하지만 사회적 공리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간섭과 부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입법도 정당화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독재적 국가도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자유주의적 요소도 있음
- 공리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와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의 이념적 바탕으로 형성
 - 공리주의는 다른 한편 분배적 평등을 강조했고, 이는 근대 복지사상의 발달에 크게 기여
- 범법자들에 대한 개인적 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정부정책과 시위참여자들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관리, 해외방문자들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관리를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정당성은?

자유주의 정의론

- 자유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 삼는 정치철학적 관점 (미국에서 보수주의를 의미하고, 정부간섭을 선호는 진보주의 의미 모두 포함)
 -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 간섭의 최소화를 지향.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 국가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 자유주의는 자연권적 소유권에 기초해서 시장적 자유를 옹호하고,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정부의 권한 강화에 반대
 -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치, 경제적 제도의 이념적 바탕을 이루고 있음. 17~18세기 로크와 아담 스미스 등에 의해 고전적 자유주의가 발전됨
- 사회적 자유주의 : 19세기 말 서구에서 발전된 정치사상으로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을 용인하는 입장
 - 공정거래 제도, 최저임금제 시행, 환경오염 규제, 무상교육, 장애인과 노약자 지원 정책 등을 인정
-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의 경찰공무원이 정당한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사생활은 어느 수준까지 통제될 수 있는가?

롤스 정의론

- 존 롤스의 정의론

- 정의는 사회제도에서 가장 제일가는 덕목
 - 정의의 두가지 중요한 점. (1) 사회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나누어 주는 제도, (2) 사회 구성원의 이득과 부담에 대한 분배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
- 공정사회, 즉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함. 이는 개인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강조한 것임.
-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 합의하는 계약을 고수하는 것이 정의
- 정의의 두 가지 원칙: 1)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칙. 2) '조정의 원리' (a) 차별의 원리, (b)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 최소 수혜자 집단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불평등한 분배 인정
- 롤스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자유주의자, 분배 문제에서는 공동체주의자로 이해될 수 있음.
 - 즉,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를 대신하는 정의론으로 전체 사회 복지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공동체주의 정의론

- 샌델의 공동체주의 정의론
 - 공생, 공익, 등 공동체의 유지, 강화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정치사상. 미덕, 희생, 봉사, 연대 정신과 같은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
 - 공리주의는 정의와 권리를 원리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행복, 쾌락, 효용 등)으로 환원했고, 인간의 삶과 행위의 가치를 양적으로 보고 질적 차이를 무시했다고 비판
 - 자유주의(칸트, 롤스)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공동선의 유대, 미덕, 헌신과 같은 가치 혹은 공동체의 삶의 특성과 질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비판.
 - 공동체주의 정의를 주장
 - 시장의 기준과 가치로써 측정될 수 없는 삶의 영역의 문제들, 예 군복무, 출산, 교육, 형무소 운영, 이민 등이 시장적 경쟁과 가치에 내맡겨지면 문제
 - 빈부의 격차가 있더라도 지배적인 재화(예, 치안서비스)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함.
- 치안서비스의 민영화 혹은 민간분야에 일임하는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
 - 또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 인정. 무조건적인 불간섭과 무관심의 태도에 탈피해야 함. 공적 삶에 대해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불륜 행위 등 사적 삶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님

경찰행정의 가치들: 공익, 민주성

- 공익 (public interest)
 - 공공의 이익, 즉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
 - 공익의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없고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과 상호 작용의 산물 (흑백차별 -> 인종차별금지)
 - 공익의 실체설은 정의, 형평, 복지, 인간존중 등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이고 규범적 개념
 - 공익은 경찰공무원의 행동 규범이자 동시에 책임성 판단의 기준.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행위에 대해 책임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0조 (공익 목적 vs. 명예훼손죄)
 - 비망의 목적이 있는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 (상대방을 가해의 의사나 목적)
 -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무죄.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와 사회 일반의 이익은 물론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될 수 있음)
 -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가? 표현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안으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가?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 표현에 이르게 된 동기 등(대법원 판례)
- 민주성
 - 민주주의 이념을 행정 윤리 또는 이론을 의미. 민주적 가치규범에 입각하여 분권화, 시민에 의한 통제, 가치에 대한 합의 등을 강조함.
 - 민주성의 두 가지 측면 : (a)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여 행정을 실현(대응성). (b) 경찰조직 내부의 민주성.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조직의 관리.

공익의 보호 vs. 표현의 자유

-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헌재는 이 조항의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고, ‘허위의 통신’이 어떤 목적의 통신인지 분명히 하지 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명확성의 원칙)
- 헌재는 이 조항의 ‘허위사실’을 두고도 “어떤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헌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나중에 그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한 뒤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일단 표출되면 심대한 해악을 해소할 수 없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이 1차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 12)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 대상)

경찰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공익

- ○○○ 경찰청장 내정자가 강원도 정선경찰서장 재직 당시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에 별장을 사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노후 대비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내정자는 강원도 정선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의 대지를 매입하고 이듬해 2층 단독 주택(별장)을 신축했다.
- ○○○ 내정자 일가가 별장을 샀던 2005년은 횡성군이 투자 유망지로 부상하던 해다. 강원도 원주시가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 조성지로 선정됐으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인근인 횡성군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탓이다. 실제로 당시 주식회사 알로에마임은 횡성군 일대에 8만여 평의 부지를 사며 이전 계획을 내놓았고, 금융사와 골프장 등도 3만여 평 규모의 개발을 예정하기도 했다.
- ○○○ 내정자 일가가 이 인근 부동산을 산 데 대해 한 국회의원은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재직했던 시기에 인근 지역의 개발 정보를 유입했을 의혹의 소지도 있다"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곱게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경찰청은 "노후 대비용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행정의 가치: 사회적 형평성

- 사회적 형평성(equity)
 - 공정성, 사회 정의의 개념과 거의 유사한 의미.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 (정당한 불평등을 인정)
 - 형평에서 분배적 정의는 어떠한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
- 법 앞에 평등 : 평등의 원칙
 - 법의 의미 : 모든 법규범. 성문법과 불문법 불문, 국내법과 국제법 불문
 - '법 앞에'의 의미 : 법내용평등설로 법의 집행과 적용 뿐만 아니라 법의 재정내용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국가작용에 대한 규제원리로 이해
 - 평등의 의미
 - 헌법재판소: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인정됨
 - 평등의 적용 : 정치적 영역에서는 절대적·형식적 평등이 강조되고,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는 상대적 평등이 보다 중시됨
 - 자의금지원칙 :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만 심사 (장애인, 노인 우대 등) (입법재량 - 예, 성인 연령, 군복무기간 등)
 - 비례의 원칙 :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심사

경찰행정의 가치들: 능률성, 투명성, 중립성

- 능률성
 - 경찰정책 결정기준으로 능률성은 정책 과정에서 적은 비용(투입)으로 더 많은 정책효과(산출)를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
 - 능률성은 행정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이고 조직의 부서간 권한이 규정되고, 엄격한 복종의 필요성이 강조. 명령불복종은 명백한 해고 사유가 됨.
 - 정책결정 기준으로써의 능률성과 조직 내부 관리상의 능률성으로 구분. 전자의 예로 아동학대 방지의 정책, 후자의 예로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경찰청 임무와 조직의 편성
- 투명성
 -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이 정부기관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
 - 투명성의 효과는 (a) 부패 방지 수단, (b) 능률성 향상의 자극제, (c) 행정의 대응성 제고 수단, (d) 책임행정 달성
- 중립성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지키고 임무 수행 시에 공평무사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 (헌법 제7조 2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정치적 간섭을 배제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능률성,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근본의 의의가 있음.

경찰의 사건처리통보서와 결과 투명성

- '사건처리결과 통지'. 이 제도의 의도는 사건 처리 결과를 경찰서에 연락해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주려는 친절한 서비스의 하나로 도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당사자인 나에게는 매우 불쾌함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했다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이미 통보 받았고,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그 결과도 확인했는데,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결과 통지서가 등기우편도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 통지서에는 개인이 무슨 죄명으로 조사받고, 어떤 의견으로 송치되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다 적혀 있었다. 등기우편도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진 이 편지가 우체통에 꽂아 놓은 분들의 사소한 실수로 옆집에 꽂혀 있고, 옆집 아이가 자기 집에 온 편지라 생각하고 그냥 뜯어봤다면 개인정보는 그대로 옆집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을 것이다. "경찰이 일반우편으로 보내주는 '사건처리결과 통지'는 과연 친절한 행정 서비스일까?"
- 친절한 행정 서비스? 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당사자가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의견을 보내야 하는 이유로, 관공서에서 보내는 통지서는 불가피하게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야 한다. 법원에서 보내는 재판 관련 우편물이 그렇고 검찰청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보내주는 통지서도 그렇다. 그 문서를 송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권리행사 마감 기한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경찰이 보내주는 사건처리결과 통지는 앞에서 설명한 공문서와 다르다. 그저 결과를 알려주는 것일 뿐 통지서를 제대로 받거나 받지 않거나 법적 효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하니 등기우편도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이다. 관공서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시민들에게는 친절 한 서비스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다. 수사 관련 사건 당사자에게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사건처리결과 통지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SBS, 2020/9/16)

경찰행정의 가치: 인권

- 인권의 의의
 - 인권의 개념
 - 자연법과 사회계약론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 기본적인 권리는 박탈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천부인권사상' 이라고 함.
 - ❖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 천부적 권리, 즉, 자연권을 의미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1호 -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 인권침해의 의미
 - 인권침해란 경찰관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정의) 제2호
- 인권이 지니는 특성
 - 정당성 판단의 기준
 - 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함. 헌법에서 국가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함. (제10조)
 - 보편성
 - 인권은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이어야 함
 - 특권의 개념과는 반대됨.
 - 상호의존성
 - 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함.
 - 불가분성
 - 인권은 그 내재된 권리 중 일부의 구현으로는 보장될 수 없고, 전체가 실현될 때만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음.

- 인권의 유형
 - 시민적 정치적 권리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국가의 강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는 것
 - 사상과 양심의 자유, 참정권의 보장, 의견표명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 의식주의 보장, 노동조건의 보장, 교육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등
 - 법적 권리
 - 모든 인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우받을 권리
 - 절차적 권리 또는 규범적 권리와 연관
 - 법 앞의 평등, 무죄추정, 공정한 재판, 소급입법 방지, 접견교통권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주로 문제가 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모든 권리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 원칙
 - 모든 사람이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 국적,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사상, 신분, 성적지향, 장애, 나이 등에 의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함.

- 경찰 인권시책의 흐름
 - 1970년대 이전 : 인권보다 검거율 제고 우선
 - 범인 검거율 및 실적 제고가 수사활동의 목표임
 - 전쟁수습, 집회시위 등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주력함
 - 1970년대 : 인권구호는 등장하나 구체적인 인권시책 미흡
 - 정확한 검거활동과 적정수사를 통한 국민의 안전보장이 목표임
 - 국민의 자기방범 및 수사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함
 - 1980년대 : 인권보다 사회안정 우선
 - 10.26 이후 민주, 개방화 요구로 사회 전반의 혼란 지속됨
 - '새시대 새경찰' 구호 아래 금품수수 및 폭력 없는 경찰 강조함
 - ❖ 권인숙('86), 박종철('87) 사건 이후 '인권존중 수사풍토의 정착' 개념 등장
 - 1990년대 :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비해 인권경찰 만족도 미흡
 -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시민들의 인권의식 고양,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요구됨
 -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노력하였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인권경찰 만족도는 미흡함.
 - 2000년대 : 인권중심으로 직무 패러다임 전환 시급
 - 국가인권위원회 발족(2001, 11)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인권 관련 NGO의 적극적 활동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인권 기대의식 상승됨
 -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의 인권마인드 부족으로 각종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발생함.

- 경찰 인권시책의 흐름
 - 2010~2011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수사국에서 감사관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직제 조정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지침의 이행을 담보하는 등 인권수호 의지에 대한 재차 확인 및 중점추진과제로서 인권 강조함
 - 2012년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 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2015~2020년 :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 (2018)
 -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심야조사 제한(2019)
 -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보장 (2019)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부서 사무환경 개선 (2019)
 -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 중심 조사, 면담기법 개발 (2019)
 - 2020년 :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 (경찰청훈령, 2020. 6.)
 - 제1조(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 제2조(적법절차 준수), 제3조(비례 원칙) 등 포함.
 - 2021년 7월 기구개편 : 시도청 / 청문감사담당관→청문감사인권담당관 . 경찰서 / 청문감사관→청문감사인권관

행정윤리의 핵심적 가치

- 공무원의 행동 규범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법제화
 - 행동 규범의 법제화는 윤리 규범을 법규범화를 의미
 -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행동 규범이 자율적으로 준수되도록 촉진하고 지원하고, 중요한 윤리 규범은 이를 법규범으로 규정해 의무화
- 경찰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들은 최고 법규범으로서의 헌법과 다양한 개별 법령 속에 규정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규범이 포함
- 법규범 중에 헌법은 행정 가치의 핵심을 포함
 - 민주 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헌법적 가치들은 인권, 자유, 법 앞의 평등,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적법 절차, 참정권,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과 비밀의 보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주성,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행동 규범
 -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종교 중립의 의무
 -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의 수령 규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

-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행동 규범
 - 성실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상실로써 책임을 완수함. 성실의 의무는 조직에서 담당 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민주성, 능률성, 창의성 등의 가치 기준을 존중하라는 규범
 - 친절·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공적 일과 사적 일을 분별하고 국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 공익 추구, 공정성 유지, 능률성 확보, 국민 의사 존 중 등의 가치 기준 표현
 -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접수 할 수 없음.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아야 함. 청렴의 의무는 부패 방지를 위한 규범임.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유지해야 함. 직장 밖의 사회생활 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에 걸맞는 품위 유지. 구체적인 품위의 내용은 정부조직의 규범과 사회 통념에 의해 규정 됨.
 - 비밀 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 민주 국 가의 의무가 행정상의 다른 가치들과 충돌하는 경우 많음. 예컨대, 민주성의 요구와 충돌 가 능.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국민에 의한 행정 통제 등과 상충함.

- 장기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해임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파출소장이었던 김모씨는 2002년 3월 식당을 운영하던 이 모(여)씨를 만나 2003년 1월 성관계를 가진 뒤 이씨가 살도록 아파트를 임차해 주는 등 2년 10개월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 김씨는 또 2004년 3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는 자리에 합석해 유흥을 즐기는가 하면 주민들과 수 십차례에 걸쳐 1점에 100원~200원 짜리 내기 고스톱을 치기도 했다.
- 이씨의 진정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해임 통보를 받았고 소송을 냈다.
- 1심과 2심은 김씨의 품위 손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실이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 등을 고유의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같은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김씨가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해 오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근무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김씨에 대한 해임이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